



의안번호	제 2009 - 11 호
의 결 연 월 일	2009. 4. 13. (제17차 회의)

보
고
안
건

운영지원단 업무보고

제 출 자	운영지원단장
-------	--------

목 차

I. 양형기준안 의견수렴 결과	1
1. 개요	1
2. 주요 쟁점	1
II. 소위원회 및 전문위원 업무지원	4
III. 양형기준안 적용 효과 분석	5
1. 목적	5
2. 관련 규정	5
3. 추진 경과	6
4. 분석 내용	6

I. 양형기준안 의견수렴 결과

1. 개요

- 강도/횡령·배임/위증·무고범죄 양형기준안에 대하여 양형위원회 규칙 제 11조에 따라 법원과 관계 국가기관·공공기관·연구기관·단체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 의견조회 결과를 아래와 같이 보고
- 조회 내역
 - 대상 기준안 : 제2차 공청회 개최결과와 전문위원단 검토내용을 토대로 양형위원회 제15차 회의(2009. 2. 19.)에서 수정 심의를 마친 강도, 횡령·배임, 위증·무고범죄에 관한 양형기준안
 - 회신 기관 : 경찰청, 대검찰청, 대법원, 대한법무사협회, 전국경제인연합회, 참여연대, 한국가정법률상담소, 한국교정학회, 한국형사정책연구원
 - 조회 기간 : 2009. 2. ~ 3.

2. 주요 쟁점

가. 강도범죄 양형기준안

(1) 이미 심도 있게 논의된 부분

- 유형구분의 적정성
- 형량범위의 중첩과 폭의 적정성 여부
- 형량범위 설정의 적정성 여부(법정형 하한과의 관계)
- 특별가중인자인 ‘총기 사용’, ‘5인 이상 공동범행’, ‘금융기관 강도’를 제외
- 특별가중인자인 ‘5인 이상 공동범행’을 ‘3인 이상 공동범행’으로 변경

-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에, 특별가중인자인 ‘반성 없음’을 제외
- 특별감경인자인 ‘체포를 면탈하기 위한 단순 폭행·협박’, ‘기본범행이 미수에 그친 경우’, ‘유족 처벌불원’을 일반감경인자로 변경
- 특별감경인자인 ‘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’의 구체화
- 일반감경인자인 ‘생계형 범죄’, ‘경미한 액수의 금품 강취를 의도한 경우’, ‘흥기 단순 휴대’를 제외
- 일반감경인자인 ‘진지한 반성(자백)’의 인자 정의에서 단순 자백을 제외
- 일반가중인자인 ‘동종 또는 폭력·절도 실행전과’에 집행유예 및 벌금 전과도 포함
- 집행유예 주요부정사유인 ‘위험한 물건 사용’을 일반부정사유로 변경
- ‘사회적 유대관계 결여(또는 분명)’, ‘피고인 고령’을 집행유예 참작사유에서 제외
- 복수 양형인자, 집행유예 참작사유 평가원칙의 적정성 여부

(2) 추가 논의가 필요한 부분

- 살인죄와 마찬가지로, 강도살인에서 ‘사체손괴’를 특별가중인자로, ‘사체유기’를 일반가중인자로 추가
- 특별감경인자인 ‘합의’에 ‘상당한 피해회복’ 또는 ‘진지한 노력’을 조건으로 부가
- 집행유예 주요부정사유인 ‘2회 이상 동종전과(5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)’를 ‘2회 이상 동종전과(10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)’로 변경

나. 횡령·배임범죄 양형기준안

(1) 이미 심도 있게 논의된 부분

- 횡령과 배임범죄의 별도 기준 설정 필요
- 유형분류의 세분화 필요
- 형량범위 설정의 적정성 여부
- 특별가중인자인 ‘대량 피해자를 양산한 경우’와 ‘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’가 중복 적용될 우려
- 특별가중인자인 ‘범행수법이 불량한 경우’의 적용범위 축소
- 특별가중인자인 ‘범행수익을 의도적으로 은닉한 경우’를 제외
- 특별감경인자인 ‘실질적 1인 회사’를 구체화하여 일반감경인자로 변경
- 일반감경인자인 ‘범죄수익의 대부분을 소비하지도 못하고 보유하지도 못한 경우’, ‘피해기업에 대한 소유지분 비율이 높은 경우’를 제외
- 일반감경인자인 ‘사회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구체적으로 증명된 경우’를 제외
- 일반가중인자인 ‘동종 및 유사재산범 실행전과’에 집행유예 및 벌금전과도 포함
- 주요부정사유인 ‘실질적 손해규모가 상당히 큰 경우’의 금액기준 하향
- ‘사회적 유대관계 결여(또는 분명)’, ‘피고인 고령’, ‘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’을 집행유예 참작사유에서 제외
- 복수 양형인자, 집행유예 참작사유 평가원칙의 적정성 여부

(2) 추가 논의가 필요한 부분

- 특별감경인자인 ‘임무위반 정도가 경미한 경우’의 인자 정의에서 ‘재물을 보관하는 용도에 반하여 처분하였으나 변제자력과 변제의사를 가지고 있었던 경우’를 제외
- 특별감경인자로 ‘범행 당시 객관적으로 행위규범(금지규범)이 정립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’를 추가

다. 위증·무고범죄 양형기준안

(1) 이미 심도 있게 논의된 부분

- 형량범위 설정의 적정성 여부
- [위증범죄] 특별감경인자인 ‘우발적 범행’을 제외
- [위증범죄] 일반감경인자인 ‘제반 사정에 비추어 증언의 신뢰성이 극히 낮은 경우’를 제외
- [무고범죄] 특별감경인자인 ‘피무고자의 승낙이 있는 경우’를 제외
- [무고범죄] 일반감경인자인 ‘참작할 만한 범행동기’를 제외하거나, ‘비난할 만한 범행동기’를 일반가중인자로 추가
- [무고범죄] 일반감경인자인 ‘피해자 처벌불원’을 제외
- 복수 양형인자, 집행유예 참작사유 평가원칙의 적정성 여부

(2) 추가 논의가 필요한 부분

- [위증범죄] 특별가중인자인 ‘경제적 대가의 수수’ 외에 ‘경제적 대가의 약속’을 일반가중인자로 추가
- [위증범죄] 집행유예 기준에서 ‘피지휘자, 피감독자에 대한 교사’를 주요부정사유로, ‘위증을 교사한 경우’를 일반부정사유로 추가
- [무고범죄] ‘공무원의 직무수행과 관련된 무고(또는 수사·재판기관 종사자에 대한 무고)’를 특별 또는 일반가중인자로 추가

II. 소위원회 및 전문위원 업무지원

- 운영지원단(기획운영과)은 소위원회 회의와 전문위원 전체회의 회의

자료 준비, 회의록 작성 등의 지원업무를 수행하였음

○ 소위원회 회의 현황

회의명		일 시	안 건
소위원회 회의	제9차	2009. 4. 3. 14:00	○ 2차 의견수렴 절차에서 제기된 쟁점, 양형기준 매뉴얼 등 검토
소위원회 회의	제10차	2009. 4. 7. 08:00	○ 2차 의견수렴 절차에서 제기된 쟁점 등 검토

○ 전문위원 회의 현황

회의명		일 시	안 건
전문위원 전체회의	제17차	2009. 3. 27. 15:00	○ 양형기준 매뉴얼 등 검토

III. 양형기준안 적용 효과 분석

1. 목적

- 양형기준을 확정하기 전에 양형기준이 미치게 될 효과를 미리 예측·분석함으로써 양형기준의 도입에 따른 상황변화에 대비
- 구체적 사건에 양형기준을 적용해봄으로써 양형기준의 적정성, 적용 편의성 등을 점검
- 전문위원 연구과제인 ‘양형기준안 효과 분석’을 위한 기본틀 제공

2. 관련 규정

○ 양형위원회 운영규정

▶ 제19조(양형기준 의견 전의 고려사항)

위원회는 양형기준을 의결하기 전에 양형기준의 적용이 수사 및 재판절차에 미치는 효과, 범죄예방 및 수형자 수의 증감에 미치는 효과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.

3. 추진 경과

가. 분석 기간

○ 2009. 3. 2. ~ 2009. 3. 31.

나. 분석 대상

○ 2004. 3. 1. ~ 2007. 2. 28. 3년 동안 전국 1심 법원에서 유죄판결을 선고받아 확정된 피고인 42,360건(실제 입력된 건수) 및 2007. 3. 1. ~ 2007. 12. 31.까지의 단일범에 대한 추가양형자료

다. 분석 방법

- 양형자료조사에서 나타난 실제형량과 양형기준안의 특별양형인자 준부에 따른 형량범위 중간값을 비교하여 형량의 경중을 파악
- 수형자 수의 증감을 예측하기 위해서는 형량의 경중 외에 징역형의 집행 여부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나 집행유예 일반참작사유를 파악하는 데 애로가 있어 현 시점에서는 수형자 수의 증감 예측은 보류

4. 분석 내용

○ 살인, 뇌물, 성범죄, 강도, 횡령·배임, 위증·무고범죄에 대하여 분석을

실시하였음

- 살인죄를 제외한 나머지 범죄에 대한 분석 내용은 별도 자료집에 수록한 보고서 기재와 같음 (살인죄에 대한 분석 내용은 제16차 회의 자료집에 수록)